

Session 1. 여성일자리와 건강을 살리는 서울

토론 1.

**여성일자리, 성평등과
노동가치를 말하다**

박진경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1. 성평등과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여성경제활동이어야

- 여성경제활동참여의 주된 목적은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노동영역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고 완전한 경제적 주체가 되는 사람중심의 노동 가치 실현에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비롯한 주요 시·도의 관련 계획에서는 이러한 가치철학적 여성경제활동참여의 목적 보다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경제성장과 시장효용의 도구적 의미로 여성을 동원해야한다는 논리로 대응해옴.
- 이로 인해 여성 노동의 주체성은 결여된 채 국가와 시장의 필요에 따라 '고용'의 처분만을 바라는 피동적 주체로서 동원되어지고 있음.
- 또한 신자유주의의 경제 효용이 모든 가치를 압도하면서 성별 직종분리와 성차별적 고용환경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도 '고용률'에 집중한 국가 정책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구조적 문제를 감추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로드맵으로 인해 '시간제일자리'에 집중하거나 경력단절 여성이 불안정하고 영세한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리는 가운데 여성 노동의 가치는 더욱 평가절하 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성별분리구조와 그에 따른 성별격차를 강화하고 있음.
-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안)의 기본방향을 보면, 과거 계획의 도구적 인력개발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 노동의 권리와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성평등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임.
- 좋은 일자리 창출, 대안적 경제, 노동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연령별 단순 접근이 아닌 생애주기에 따른 집단별 다층적 접근으로 기본방향과 구체적 실천과제를 마련한 것은 매우 선도적이고 시의적절한 접근임.

2. 여성의 요구와 현실의 간극을 줄여야

- 정책 수요조사의 대상을 서울시 비취업 여성, 즉 '숨은 실업자'로 선정한 것은 일자리 계획인 만큼 비취업 여성의 일 경험과 노동 욕구에 부합하기 위한 것

으로 보여짐.

-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조사대상자가 현재 비취업 상태여도 78%가 과거 일경험이 있고, 이들의 경험은 사무직, 서비스직으로,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에 종사하였고, 월평균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많았고, 일을 그만둔 이유 역시 '근로조건 및 직장환경'을 꼽고 있는 것을 보면 여성의 생애 전반에 불평등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한편 여성이 경제활동을 원하는 이유가 생활비 및 노후자금, 교육비, 빚 등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여성이 보조생계부양자에 머물지 않고 주요생계부양자로서 경제활동의 불가피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진입 노력이 예상되어지나, 앞서 여성가족부 조사¹⁾에 의하며 경력단절 전후 심각한 임금저하와 서비스, 판매직 및 4인이하 영세사업장 등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의 재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 경력단절 여성임을 감안할 때, 그들의 과거 일 경험에 비취 노동조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과제가 도출되어짐.

○ 또한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보면 주관적 인식에서는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42.4%였으나 ILO 기준에서는 고용안정을 70.7%가 꼽고 있으며, 임금, 평등대우, 안전환경 등도 60%가 넘는 높은 조건으로 꼽고 있어, 현실에서 여성에게 주로 제공되어지는 비정규직, 시간제, 낮은 임금에 대한 여성인식이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음.

- '좋은 시간선택제' 요건으로 시간당 임금 최소 8,000원에 자유로운 활용과 정규직 조건을 들고 있는데, 얼마 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조사에서는 좋은 시간선택제 조건으로 주35시간, 187만원(시간당 12,700원)의 정규직 조건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평등한 노동조건 개선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여성의 욕구와의 간극으로 인해 여성경제활동은 물론 여성의 노동시장내 지위는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임.

3. 잘못 짚어진 일가정양립 정책을 바로잡아야

-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으로 육아휴직관련 대체인력 지원이나 휴직 사용 보장하는 기업분위기 조성을 가장 높게 꼽고 있어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조차 그 사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가정양립'의 경우 여성주의적 관점은 여성에게 전적으로 부가되어온 재생산 영역인 가사와 육아를 국가와 남녀가 함께 나눔으로써 여성의 노동단절 없이 안정적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남성에게는 과도한 노동시간 조절을 통해 재생산영역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생활권' 회복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대전환이 주요 목적이었음.
- 그러나 오히려 '일가정양립'이 여성에게만 집중되면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열악한 인프라 속에 취업여성의 이중부담만을 안겨주어, '일가정양립'을 위해 시간제라도 선택해야하는 절박함을 이용하여 마치 여성이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무엇보다 시장경제의 효용성에 기반한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절하와 불평등구조의 심화에도 이를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하고, 발견하더라도 여성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책임으로 전가하게 됨.
- 본 계획에서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 영역은 별도로 두지 않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영역 안에 유급가족간호휴가제 및 남성 육아휴직 쿼터제, 국공립 어린이집 목표제, 서울형 노동시간 모델 구축 등 일가정양립의 인프라 구축 및 남성분담에 초점을 두고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정책을 제안하고 있어 의미가 있음.
- 다만 관련 계획이 아직은 수요파악이나 모델(안)마련 등 기초 수준의 계획이어서 이러한 계획이 추진과정에 많은 장애가 예상됨으로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됨.
- 서울시가 운영 중인 일가족양립지원센터의 경우에서 '일·삶 균형'이라는 명칭변경을 비롯하여 성평등적 가치와 남녀 '생활권' 회복의 가치 실현의 관점에서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이에 맞는 역할 강화가 요구됨.

4. 기타

- 사전적·사후적 성별고용영향평가제의 경우 고용률과 같은 '양'의 접근에만 머물러 있을 경우 '좋은 일자리'의 확충이나 전환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 실제 고용이후에도 불평등한 노동조건과 환경은 여성의 요구와의 간극으로 여성 노동단절이 수차례 발생하게 되면서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감소하게 되는 악영향을 미침.
 - 이를 예방하고 서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질적 개선을 위해 사후적 성별고용영향평가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여성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모델 개발에 더 큰 비중과 역할 요구됨.
 - 서울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 모델은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의 가치 회복, 평등하고 민주적 경제 모델이라는 점에서 여성주의적이고 미래지향적 경제 모델임
 - 따라서 여성일자리 정책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함.
 - 다만, 사회적 경제 형태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60%가 넘고 있으나 관리자나 리더는 남성이 대부분이라 점에서 젠더관점의 사회적 경제 영역 리더 양성 및 여성의 전문성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특히 종사자내 여성의 발굴과 양성,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의사결정직 여성 확대 및 대표성 제고' 추진과제에 제시된 항목을 보면, 서울시 산하기관 여성임원에 관해서는 성과목표 설정이 빠져있는데 2013년 13.0%로 2011년의 5%에 비하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지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성과 목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과제명이나 추진과제명을 보면 성평등적 관점과 노동가치적 관점에서 용어 선택에도 깊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 '근로조건', '근로환경', '근로실태'의 경우 '노동조건', '노동환경', '노동실태' 등 변경을 제안함.

Session 1. 여성일자리와 건강을 살리는 서울

토론 1.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안)

토론문

이 영 희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시장경제 고용 중심의 일자리의 (양적) 창출이라는 정책목표에서 벗어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여성의 다양한 노동을 가시화, 의미화하여 정책의 주요한 실체와 목표로 인식하는 정책방향에 매우 공감합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언제나 끊임없이 일해 온 여성들의 다양한 노동을 제대로 평가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이 노동영역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며 재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이 일자리에 진입하기도 어렵지만 단절 이후 재진입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경력단절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단한 부분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출산 육아 때문만이 아니라 기간만료,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입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및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이 일자리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등장한 것은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권, 여성집중직 종종사자의 근로조건 실태조사 같은 것들은 우리사회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갈수록 심화되는 가치편파와 멸시의 추세를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략산업분야 교육훈련 지원은 노동세계의 성별 분리를 제거하고 여성에게 보다 많은 노동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1.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책임의식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권, 노동권 감수성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바뀌면 사업주도 바뀔 수 있습니다. 대시민 노동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예컨대 소비자 협동조합과 연계한 캠페인이나 돌봄노동자이면서 소비자인 김여사의 하루 같은 웹툰 등 창작물 콘텐츠나 배급 지원 사업 같은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캠페인과 창업 지원의 연계와 같이 각 사업의 실현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법이 서로 연계되는 방식으로 짜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정책대상에서 여성무급가족종사자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약 10%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정책에서도 이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소득수준, 건강, 가족 내 지위, 업무자율성, 근로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고 삶의 질이 낮은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정책수요파악이 임금노동자 등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이들은 정책대상으로 가시화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3. 아울러 이들은 주로 자영업자(개인사업주의 가족)인데 우리사회의 자영업자에 대한 건물주, 프랜차이즈 본사, 금융회사의 경제적 압박과 착취, 부조리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업계는 대부분 소매업, 숙박음식업으로 종사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즉 열악한 업계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영업자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개선 및 지원, 분쟁조정, 구제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일명 자영업자 재생프로젝트? 라고 할까요.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창업지원, 좋은 일자리창출, 사회적 경제 구축, 마을 재생 등 서울시의 역점 사업과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서울시는 여성일자리 정책 관련 문서에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지속', '여성고용의 낮은 질'와 함께 '노동시장 내 성차별 요소 상존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해왔다고 진단하셨고,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여성은 정규직 입직이 어렵고 고용계약기간이 짧고 경력이 단절되고 성차별당하는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성차별 개선에 대한 과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 내 성차별에 대한 법적, 조직적 구제수단이 거의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소한 서울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만이라도 성차별 금지 내지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 분쟁조정기구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Session 1. 여성일자리와 건강을 살리는 서울

토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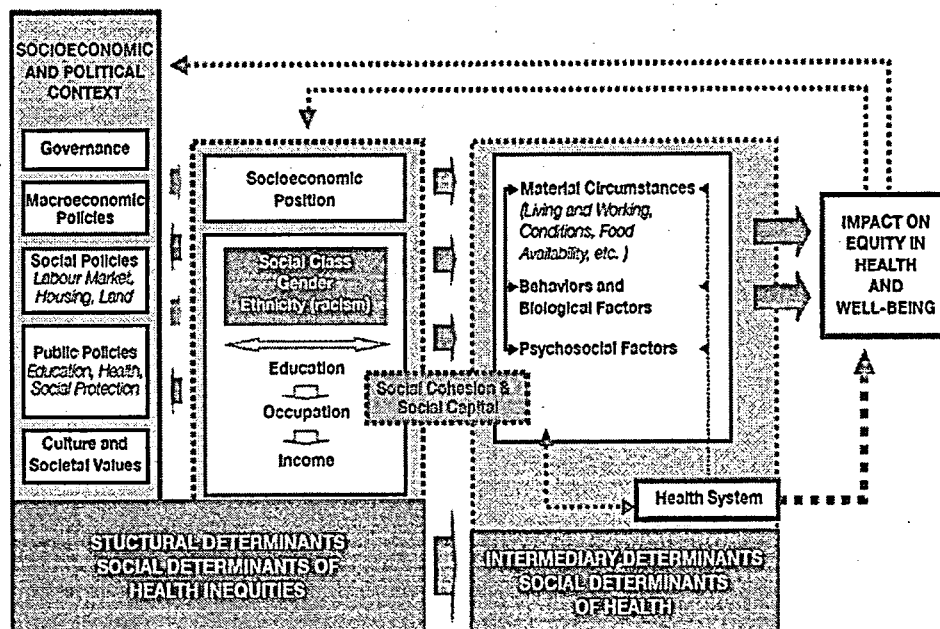
**소녀부터 할머니까지
건강잠재력 키우기**

정 진 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여성의 정신건강 이슈를 전체적으로 다루어 보고,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령대별 정신건강 정책 및 사업을 점검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특히 의료적인 질환 중심의 여성건강이 아니라 구조적-현장지향적-문화적-역사적 관점에서 생활세계를 고려하여 정신건강을 접근해 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작이라고 보여짐. 사실 이러한 건강문제는 정신건강뿐 아니라 대부분의 건강 이슈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 이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제는 한번의 보고서에 담기에는 그 내용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생애주기별 여성의 정신건강 현황, 정책, 대안은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젠더와 연령만이 아닌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 젠더 관점에서의 생활세계의 문제, 한국사회의 정신건강의 문화적 배경, 정신건강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다학제팀의 형성으로 이 주제의 실마리는 풀릴 것으로 보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성건강통계가 2번(2003, 2013년) 생산되었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근거에 기반해 분석과 대안을 찾아갈 필요가 있음.

○ 건강의 이슈는 이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문화적 기제를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WHO에서도 건강을 질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모델이 중요하고, 젠더는 사회계층, 인종등과 함께 거대한 정책 및 생활세계의 삶을 구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WHO의 모델과 문화적 요인이 함께 고려되는 정신건강 패러다임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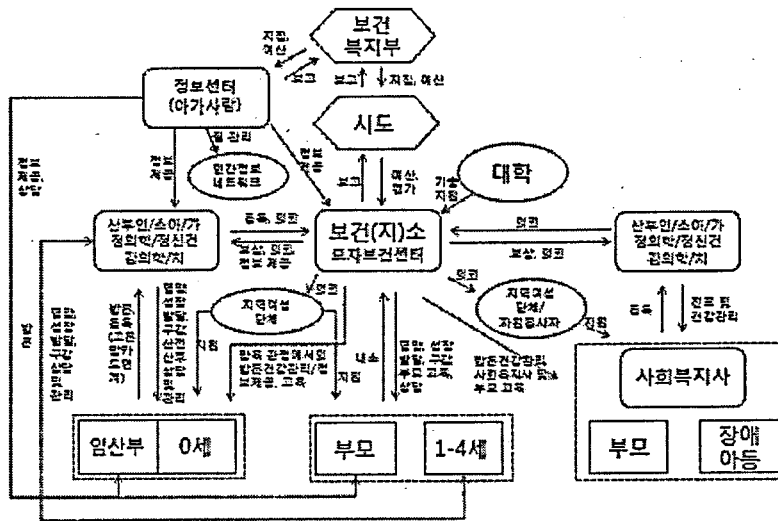


○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자주력을 키워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함. 지역사회는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단순히 가져오기 힘든 상황에서 사회구조적인 건강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 지역의 역량강화와 주민의 참여와 자주력 향상을 위

해서 중요한 전략이기도 함. 정신건강을 지역에 기반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결집되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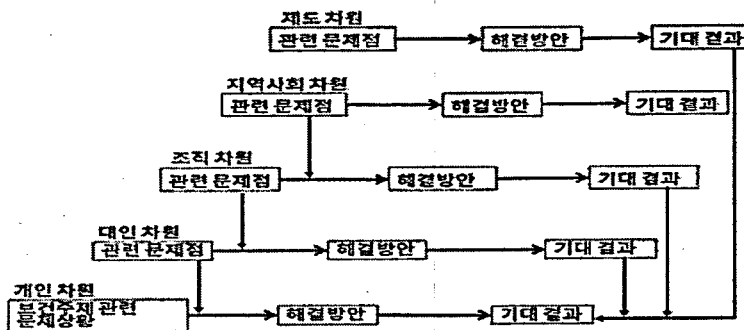
예를 들어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방문사업을 모든 여성에게 실시해서 필요한 상담 및 정보를 얻고, 개별적으로 홀어 있는 엄마들을 자조모임을 형성해 산후우울증과 엄마들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느끼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

영유아/모성 양육과 연계된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모형



또한 성동구와 서초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건강 사랑방 운영과 운동모임의 형성으로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교류를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도 여기에 해당됨. 성동구의 경우 지역별 특성이 다른 3곳에 건강사랑방을 운영하고, 여성노인의 운동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모형은 현재 일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개호보험)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보여짐. 강북구의 경우

○ 문제의 해결은 생태학적 모델에 기반해 차원을 달리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Session 1. 여성일자리와 건강을 살리는 서울

토론 2.

**'서울시 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에 대한 토론**
- 심리상담 지원을 중심으로 -

권 경 희

착한벗심리상담센터장/상담심리전문가

1.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삶에서 환경과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다.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 전과 후, 그리고 연령대별로 삶의 굴곡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번에 제언한 정책은 여성의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 생애 주기를 감안하여 기획하였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신건강 지원에 실질적이며 효율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의 사후 처리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시각으로 접근한 점이 탁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현재의 정신적 건강 상태에는 과거 삶에서 받은 영향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역사적이면서도 통합적 관점으로 파악한 측면에도 깊게 동의한다. 또한 여성들이 정신적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적인 면을 함께 보는 시스템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간과하지 않았다.

2. 생애주기별 세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한부모 가족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청소년기와 관련해서 학교 상담실이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학습권 위주의 학교 시스템으로 인해 현재의 '상담실'이 문제 학생을 선도하는 '선도실' 역할을 부드럽게 대행하고 있는 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결국 상담실이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문제아를 다루는 곳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또래 집단 내 낙인' '왕따' 문제 등을 고려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반갑다.

청년기와 관련해서는 은폐된 우울, 이름 없는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한 자조모임을 제안하면서 '익명성 보장'을 강조한 것이 가장 주효해 보인다. 이 시기에 예방적 차원의 도움이 평생 정신 건강, 그리고 이들이 이를 미래의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의견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학 내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 치료 건강 도움이 대학 밖에서는 매우 취약함을 지적한 점에 이 연구의 높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대상 조기검진 시스템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살핀 것도 적절한 지적이었다.

중장기에 대해서는 우울증 특성을 가진 여성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제안은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함께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 ‘죽을 기운’조차 없다는 이들이 밖으로 나와 상담 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삶의 끈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몸이라도 움직일 기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원 기관을 배치하도록 하자는 배려도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들이 사회적 낙인 등의 우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조심스러운 발걸음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줘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고 지적해 놓았다. 일과 육아,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시간, 장소의 제한이 적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 또한 잘 지적하였다. 이들에게는 경제적, 환경적 도움과 함께 가장 필요한 것이 심리상담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신건강 잠재력 강화는 결국 심리적 안정과 심리적 성장에서 오기 때문이다. 노년기에 관해서는 접근성 강화와 사회적 관계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독거노인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제언이라 할 수 있다.

3. 추가할 사항

전체적으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총망라해서 잘 논의하였다고 사료된다. 무엇보다 힘든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심리상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서 깊이 공감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일반 직장인의 근무 시간’ 내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여 ‘근무 시간 외’, 그리고 ‘주말’ 또는 ‘휴일’ 서비스 제공을 주장한 면도 뛰어나다. 특히 한부모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홀로 가사와 육아, 교육을 함께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근무시간 내에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한 제언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의 제안 또한 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첨언한다면, 어머니가 심리상담을 하는 동안에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아이를 돌보면서 상담을 해야 하므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아이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제언할 점은 그동안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서울시의 서비스가 ‘자원봉사’ 수준에서 이루어져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점검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은퇴 후 기능재부를 하는 형식이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의 초보자 또는 수련생이 수련 과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정신건강 잠재력 강화를 위한 심리상담에서 전문성 제고가 매우 필요하며, 전문가 투입을 위한 인력 확보, 예산 배정 등의 현실적 지원도 절실하다는 점을 보완하면 좋겠다.

또한 청소년기 여성 지원 방안 중에 청년기 여성 중 대학 외 여성들을 고려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좀더 비중을 두어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들이 제도권 밖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Session 2. 다양한 여성이 움직이는 서울

토론 3.

〈여성, 지역에서 세계를 말하다〉 토론문

이 해 응
서울시명예부시장/여성학자

우선, 강희영 연구위원의 지역차원에서 선·이주민의 통합을 위한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실태조사>과정에 여러번 참여했었던 사람으로서, 보고서 완성에 축하를 드리며 실태조사에 기반한 여러가지 좋은 정책제안을 하고 있어 매우 반갑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공간적 정책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밀집지역의 중국동포 주민 뿐 아니라 다른출신의 이주민의 특성도 고려하고 오랫동안 지역에 살아온 한국인 주민도 고려하며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문화 중점학교 지정 및 다문화 특성화 학교의 프로그램이 이주민 자녀의 한국적응만 고려한 프로그램이라서 선주민들이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선주민 자녀들에 대한 특화된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과 선주민들의 다문화 사회 적응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점은, 기존의 많은 연구가 이주민만의 '적응'에 초점을 맞춘것에 비해 상호 적응과정의 문제임을 드러냈기에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어 매우 좋았다.

또한 서로에 대한 선입견이나 인식, 예를 들어 '게토화'가 아니라 '밀집지역'이라는 점, '집값이 저렴해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 한국인 선주민도 '중국어교육 등 다문화 정책 지원을 받고 싶다는 것' 등을 드러내어 상호에 대한 이해와 접촉을 위한 근거들을 잘 드러냈다는 점도 의의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몇가지에 대해 드는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1. 최근 커뮤니티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주민 자체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 게토화 될것을 우려하는 것과 달리, 이주민 자체 커뮤니티의 내적 집합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선주민(주류)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외부적 집합적 효능감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을 잘 한다고 느끼는 경우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채 새로운 문화를 체득해간다는 자기확장적 인식을 가질 때다"라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 이주민을 특화하지 않으면서 이주민과 선주민을 아우르는 지역공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하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이주민 자체 커뮤니티의 집합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중국동포들이 다문화정책과 외국인근로자정책 모두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동포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단순히 이들에 대한 '혜택 정책'이 아니라 이들의 한국에 대한 통합적 적응을 높임으로써 선주민들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히 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포 활동가 역량 강화 아카데미에는 동포 활동가를 중심으로 하지만, 한국인 활동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동포 자체 내 커뮤니티의 사회참여기능을 높일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외관상적으로 이런 정책지원 이

를 단순히 동포만을 위한 것이라는 뉘앙스의 이름보다는 포괄적인 이름의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은 고려해볼수 있다. 또한 중국동포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층위의 리더들이 있기에 각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 개인사업가들을 위한 리더역량강화 프로그램...

2. 지역단위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내 학생뿐 아니라 지역 마을 단위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매우 반가운 제안이다. 다만 여기서 좀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상호 인정과 상호 받아들이면서 서로서로 자신을 재구성한다는 '다문화적 시민'에 대한 강조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다문화교육은 나라별로 구성되기 때문에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나 언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존 다문화이해 교육이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소개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면 동포의 다문화이해교육은 동포적 관점, 역사적 관점, 다문화적 시민의 관점 등 보다 연결성과 상호성을 역점을 두고 강의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매우 중요한 것은 동포들이 주체적으로 이런강의 콘텐츠를 구성하되, 필요한 코멘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밀집지역에서 사는 동포들의 경험자체가 생생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것을 글로벌시민적 관점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잘 엮어낼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포문화원> 설립...

3. 젠더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인 선주민의 경우 자녀교육, 외국계 주민의 경우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역할 등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 보인다. 젠더관점으로 어떻게 지역적 차원에서의 통합에 기여할 것인가? 다문화중점 학교에서 상호적응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여성선·이주민의 접촉점을 늘리는 방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다시 자녀를 둘러싼 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여성을 중심으로 교류가 되다보면 오히려 기존 중국사회에서 남녀모두 학부모 역할을 하던 남녀평등의식이 뒤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요즘 한국사회에서 '아빠 어디가' 등 프로그램에서 아빠의 자녀교육 역할을 강조하고, 아빠의 양육참여, 더 나아가 가사참여 등을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젠더적 관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4. 지역공간적 정책접근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위한 접근방식이기 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주민의 경우 유동성이 많고 한국인 선주민 들도 인구유동이 많은 점을 고려할때 이는 단순히 이주민 밀집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점도 부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연구결과에서도 나오듯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지역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주민과 선주민의 상호 고정관념은 걸림돌이 될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가 특히 해당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읽힐수 있는 소책자로서 배포가 되면 좋겠다.